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697
----------	-------

발의연월일 : 2025. 6. 10.

발 의 자 : 정성호 · 김영환 · 김태년
문진석 · 박성준 · 윤준병
이강일 · 이병진 · 조정식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함.

그런데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 국가기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가기밀을 보호하고, 국가기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밀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구분함(안 제4조).
- 다. 국가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국가기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의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기관이 개발한 보안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의 안전성 확인을 거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마. 국가정보원장은 매년 이 법에 따른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현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3조).
- 바. 국가기밀의 해제 및 공개에 관한 사항과 해제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해제하지 않거나 공개하려는 경우 국가기밀해제·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 사. 국가기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등을 위하여 누설했을 때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며, 그 죄를 실행하기 전 자수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함(안 제31

조부터 제33조까지).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밀을 보호하고 국가기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밀”이란 제한된 범위의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명백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이 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군사기밀에 관한 부분은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다.

제2장 국가기밀의 취급 인가 등

제4조(국가기밀의 구분) ① 국가기밀은 그 중요성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I 급비밀, II 급비밀, III 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가기밀의 지정원칙) ① 국가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조약이나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제공받은 기밀로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그 조약 또는 국제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기밀의 지정 및 취급) ① 국가기밀은 국가기밀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이 생산되었을 때 해당 등급의 국가기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하 “국가기밀 지정권자”라 한다)이 지정한다.

② 국가기밀은 해당 등급의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취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밀 지정권자 및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각각 해당 등급 이하의 국가기밀을 지정하거나 취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기밀 지정권자) ① 등급별 국가기밀 지정권자는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가기밀 지정권자는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국가기밀의 지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원은 위임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지정권을 가진다.

③ 국가기밀 지정 권한의 위임은 국가기밀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최소한의 인원에만 대하여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밀 지정권자는 국가기밀의 누설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가기밀 지정 권한의 위임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밀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국가기밀 지정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기밀 지정 권한의 위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2. 국가기밀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 ⑤ 국가기밀 지정권자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기밀 지정 권한을 위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밀 지정권자는 지정 권한이 있는 국가기밀 등급에 대한 취급 인가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는 국가기밀을 취급하거나 접근하는 소속 직원에게 국가기밀의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③ 국가기밀 취급의 인가는 인가 대상자의 직책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대하여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는 국가기밀의 누설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가기밀 취급인가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 및 보안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밀 취급인가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기밀의 취급을 인가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9조(국가기밀 취급 등의 특례)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체의 소

속 임직원에게 소관 국가기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Ⅱ급비밀 이하의 국가기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기업체 등이 제1항에 따른 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의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것으로서 국가기밀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사실·물건 또는 지식에 대하여는 그 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가 국가기밀로 지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체가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기밀을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기밀의 취급 인가를 받은 개인 또는 기업체에 대한 국가기밀 취급 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기밀 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국가기밀 등급 표시 등) ① 국가기밀을 지정한 자는 국가기밀로 지정함과 동시에 국가기밀 등급 표시를 하고, 관리번호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보존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등급 표시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기밀 등급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기밀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국가기밀의 소재를 숨기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밀의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 및 관리되는 국가기밀의 일부나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첩보 또는 정보자료 등의 국가기밀은 보존기간과 보호기간을 같게 할 수 있다.

제3장 국가기밀의 보호와 관리

제11조(국가기밀의 보호·관리의 원칙) ① 누구든지 국가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도난·화재·파괴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국가기밀을 보호하고, 국가기밀 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취급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 국가기밀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의 지정·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을 지정하기 이전 단계에서도 국가기

밀로 지정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관리에 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밀의 원본은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국가기밀을 지정한 사람이 지정 당시 소속된 공공기관(제9조제2항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체가 생산한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국가기밀을 지정받은 개인 또는 기업체를 말한다)에서 활용·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국가기밀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기밀의 전자적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국가기밀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국가기밀을 관리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시스템의 개발 등) ① 국가기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유통·저장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개발·제공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또는 암호자재(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등 기술적 장치(이하 “보안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안시스템

을 작동·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암호도구는 보안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개발·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보안시스템 개발·제작·기술지원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 개발·제작·기술지원 등을 한 보안시스템은 국가정보원장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14조(국가기밀 보호조치)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에 대한 접근 방지 또는 국가기밀의 소재를 숨기기 위하여 시설·지역·장비 또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국가기밀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 보안상 불필요한 사람의 접근 또는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은 공공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지정과 대상·방법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기밀의 열람) ① 국가기밀의 열람은 해당 등급 이상의 국가기밀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업무상 그 국가기밀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 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는 그 국가기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밀을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I 급 비밀의 열람은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밀을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열람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국가기밀의 복제·복사의 제한) ① 누구든지 국가기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복사하는 등 국가기밀의 원형을 재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가기밀의 원형을 재현할 수 있다.

1. I 급비밀: 그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II 급비밀 및 III 급비밀: 그 지정권자가 국가기밀의 복제·복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 이상의 국가기밀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3. 전자적 수단으로 관리되는 국가기밀에 대하여 따로 보관용 국가기밀을 만들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기밀 원형을 재현하는 경우에는 그 원

본과 동일한 국가기밀 등급과 함께 보호기간을 표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국가기밀 사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가기밀의 재지정 등) ① 국가기밀을 지정한 자는 국가기밀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기밀의 원본에 대하여 등급 또는 보호기간·보존기간의 변경 등 재지정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밀을 지정한 자는 조약이나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제공받은 기밀로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그 조약 또는 국제협약 등에 보호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재지정할 수 있다.

제18조(국가기밀의 이관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록물로 생산된 국가기밀의 원본을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밀이 해제된 경우

2. 국가기밀로 지정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경우

② 국가기밀 기록물 외의 국가기밀 자재·장비 등은 보존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기능이 소멸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급한 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국가기밀 기록물 원본의 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국가기밀의 파기 등) ① 국가기밀을 지정한 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국가기밀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는 등급 이하의 국가기밀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기밀을 파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상시와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국가기밀을 안전하게 파기하거나 반출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국가기밀의 습득·분실 등 신고) ① 누구든지 국가기밀을 습득한 자는 국가정보원에 습득한 국가기밀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밀을 보관하는 사람은 보관하는 국가기밀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가기밀관리기록부)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I 급비밀에 대한 국가기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2조(국가기밀 소유 현황 통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의 등급별 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회 정보위원회에의 연차보고) 국가정보원장은 매년 이 법에 따른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현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사고 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위하여 보안사고 조사를 한다.

1. 국가기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보호구역 접근 또는 출입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기밀의 해제와 공개

제25조(국가기밀의 해제) ① 국가기밀을 지정한 자는 국가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국가기밀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때
2. 국가기밀 지정권자의 해제요청이 있을 때
3. 그 밖에 국가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보호기간이 30년을 초과하는 국가기밀은 그 보호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지정일부터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에 자동 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국가기밀해제·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효한 전시계획 또는 비상대비계획
2. 국방 및 통일·외교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보
3. 신원정보를 포함한 정보활동의 출처·수단 또는 기법 관련 사항
4. 국가 암호체계 관련 사항
5. 국가기밀의 해제로 인하여 법률·조약 또는 국제협약의 위반을 초래하는 사항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동해제에서 제외되는 국가기밀에 대하여는

그 국가기밀의 지정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기밀의 해제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기밀에서 해제되거나 국가기밀로 재지정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가기밀의 공개) ① 국가기밀 지정권자는 지정한 국가기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9조에 따른 국가기밀 해제·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보장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국가기밀을 알려야 할 명백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국가기밀은 공개된 때부터 국가기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7조(국가기밀의 제공 및 설명)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9조에 따른 국가기밀해제·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밀을 제공받거나 설명을 들은 사람은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 요구를 받았을 때
2. 국제협상에 필요할 때
3. 조약·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② 공공기관의 장은 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국가기밀을 제공받아 국가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국가기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밀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국가기밀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국가기밀 관리기관

제28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기밀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국가기밀 관리기법의 연구·보급 및 표준화
3.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안시스템의 개발 및 안전성 확인
4.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국가기밀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취약점 보완·지원
5.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
6.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밀을 지정하거나 국가기밀의 취급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

②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 헌법기관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기밀의 분실·누설 등의

경위를 조사할 때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경위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국가기밀해제·공개심의위원회)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밀해제·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기밀 해제 제외에 관한 사항
2. 제2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밀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27조에 따른 국가기밀의 제공 및 설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국가기밀의 해제·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국가기밀 관리기관의 협조 등)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기밀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기밀 보호·관리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의 분실·누설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

거나 그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31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국가기밀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기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복사하는 등 국가기밀의 원형을 재현한 자
3. 제27조제1항후단을 위반하여 제공받거나 설명을 들은 국가기밀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

3.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밀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

⑤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밀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기밀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후단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장의 국가기밀 제출 요구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⑦ 과실로 제1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조(가중처벌) 외국 또는 그 구성원을 위하여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제33조(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이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 소속 공공기관 또는 국가정보원 등에 자수하거나 그 죄를 지

은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밀 지정 관련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생산·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국가기밀은 제5조에 따라 각각 해당 등급으로 지정된 국가기밀로 본다.

제3조(국가기밀 취급 인가자 관련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제8조에 따라 각각 그 국가기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 “국가 기밀”을 “국가기밀”로 한다.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가 기밀”을 각각 “국가기밀”로 한다.

②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군사기밀보호법」”을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한다.